

민주시민교육 현황 및 활동가 인식 조사

한승희 (서울대 교육학과)

1. 조사 내용 및 방법

시민사회의 성장으로 시민운동의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의 역할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각 시민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현황 및 활동가들의 인식과 견해를 들어보기 위하여 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주관하고 2002년 서울대의 한승희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하여 진행하였던 '민주시민교육 기초조사분석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본 설문조사는 각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크게 네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각 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일반적 현황은 어떠한가?

둘째, 각 단체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상황은 어떠하며 운영상의 문제는 무엇인가?

셋째,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활동가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넷째, 활동가들은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각 영역마다 7-15개의 하위 문항을 만들어 총 49개의 질문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질문은 객관식으로 제시하였고 특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5점척도를 제시하여 답변하도록 하였다.

본 조사는 2회에 걸쳐서 실시되었다. 첫 번째 조사는 2002년 10월에 실시되었다. 이 조사는 온라인 설문 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져 온라인 상에 특정 아이디로 접근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설문 페이지를 개발하고 각 단체의 활동가들이 자유롭게 이 설문 페이지에 접속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20일 동안 55명의 활동가들이 답변하였다. 두 번째 조사는 첫 번째 조사의 응답률이 매우 저조했다는 평가 하에 각 시민사회단체에 직접 설문지를 우편으로 배포하고 수거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는 2003년 5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 약 20일 동안 이루어졌다. 설문 대상은 2003년 '시민의신문사'에서 발간한 『한국민간단체총편람 2003』을 참고로 하여 전국적으로 1,000개의 시민사회단체를 선정하여 설문지를 우편 발송하였다. 이 중 140통이 회송되고 146명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가 설문에 답변하여 반응률 14%, 응답률 14.6%을 보였다. 본 설문조사의 결과는 위와 같은 두 차례의 설문조사를 합산하여 총 201명의 설문 결과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2002에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와 2003년에 실시한 우편 설문조사에 동시에 답변한 단체 활동가의 경우 설문이 중복 체크되지 않도록 하였다.

2. 응답자 및 응답 기관 개요

이 조사 결과는 결코 시민교육의 모집단 특성을 보여주는 자료는 아니다. 다만, 응답자(교육자)의 특성에 따라 그들이 민주시민교육의 현실을 인지하는 방식이 어떻게 구획되는지에 대한 변별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우선 설문에 대한 응답자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대에 있어서 주로 30-39세가 주류를 이루었고, 주로 상

근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선정된 기관에서 가능한 한 1인씩 대표적인 교육담당자들로 하여금 응답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 조사에서 수거된 자료는 결국 200개 정도의 시민단체의 기관응답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기관의 지역수준별 분포를 보면 44퍼센트가 지역 및 마을단위 활동단체들이었고, 전국단위 기관이 27퍼센트,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기관이 29퍼센트였다. 활동 내용을 보면 60퍼센트 정도가 시민사회관련 다양한 쟁점과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시민사회일반단체로 분류되었다.

응답자의 반수 이상이 7년 이상 시민사회단체활동에 종사한 사람들이었으며, 50퍼센트 정도가 4년 이상의 교육 부문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대상 기관 중에서 교육전담부서 및 독립적인 교육담당자를 함께 가지고 있는 곳은 28퍼센트로 나타났다.

1-1. 성 별

성별	수(명)	비율(%)
남	97	48.3
녀	103	51.2
무응답	1	.5
계	201	100.0

1-2. 연 령

연령	수(명)	비율(%)
20-29	22	10.9
30-39	105	52.2
40-49	53	26.4
50이상	19	9.5
무응답	2	1.0
계	201	100.0

1-3. 단체활동경력

경력(년)	수(명)	비율(%)
1년미만	11	5.5
1-3년	44	21.9
4-6년	47	23.4
7년이상	99	49.3
계	201	100.0

1-4. 교육부문활동경력

경력(년)	수(명)	비율(%)
1년미만	49	24.4
1-3년	54	26.9
4-6년	43	21.4
7년이상	52	25.9
무응답	3	1.5
계	201	100.0

1-5. 참여방식

참여방식	수(명)	비율(%)
상근실무자	169	84.1
비상근실무자	16	8.0
자원봉사자	6	3.0
교강사	4	2.0
기타	6	3.0
계	201	100.0

2-3. 활동대상지역:

대상지역	수(명)	비율(%)
전국단위	54	26.9
광역시도단위	59	29.4
기초자치단체단위	84	41.8
지역(마을)단위	4	2.0
계	201	100.0

2-4. 단체의 주 활동 분야

영역	수(명)	비율(%)
시민사회일반	120	59.7
지역자치및빈민	9	4.5
사회서비스	4	2.0
환경	28	13.9
문화	6	3.0
교육학술	7	3.5
종교	5	2.5
노동	9	4.5
국제	1	.5
기타	11	5.5
무응답	1	.5
계	201	100.0

2-5. 최고 중점교육사업

	수(명)	비율(%)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	59	29.4
회원(혹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 및 워크숍	74	36.8
자생적 학습 소모임(학습동아리, 독서회 등) 지원	23	11.4
기타	33	16.4
무응답	13	5.0
계	201	100.0

2-6. 교육전담부서 현황

	수(명)	비율(%)
독립된 교육부서와 전담 교육담당자가 없음	63	31.3
교육담당자는 있으나 독립된 교육부서가 없음	66	32.8
독립된 교육부서가 있으나 교육담당자가 없음	10	5.0
독립된 교육부서와 전담 교육담당자가 모두 있음	57	28.4
무응답	5	2.5
계	201	100.0

2-7. 교육프로그램 평가 회수

	수(명)	비율(%)
강좌후 반드시 실시	104	51.7
가끔 실시	73	36.3
실시하지 않음	22	10.9
무응답	2	1.0
계	201	100.0

2-8. 프로그램 평가기준 (중복응답)

	수(명)	비율(%)
수강생의 숫자	68	33.8
수강비와 비용의 대비에 의한 수익성	16	8.0
수강생의 만족도	143	71.1
회원확보율	43	21.4
소속 기관/단체차원의 내부 평가	118	58.7
교육 담당자의 상황 판단	46	22.9

2-9 교육재원확보방안

	수(명)	비율(%)
회원들의 회비	68	33.8
수강료	41	20.4
외부 단체 및 기업의 후원금	17	8.5
정부/지자체의 보조금	55	27.4
기타	13	6.5
무응답	7	3.5
계	201	100.0

2-10 주요교육장소

	수(명)	비율(%)
구민회관, 자자체 시설 등의 공공시설	30	14.9
지역 내 학교시설	6	3.0
자체 공간	102	50.7
다른 시민사회단체의 시설	14	7.0
일반 사무실 빌딩의 시설	11	5.5
기업체 연수원	5	2.5
종교기관의 시설	11	5.5
호텔, 극장, 식당 등 영업용 시설	3	1.5
기타	17	9.5
무응답	2	1.0
계	201	100.0

2-11 프로그램 후 소모임조직여부

	수(명)	비율(%)
네	117	58.2
아니오	82	40.8
무응답	2	1.0
계	201	100.0

3. 시민교육 기본 여건의 문제

설문지를 통해 발견된 민주시민교육 현황에 대한 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다.

기관 대부분이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에 대한 교육내용선정의 문제에 있어서는 비교적 확실한 방향을 가지고 있었다. 내용 선정에 대해 뚜렷한 기준이 없다고 대답한 기관이 17퍼센트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그 선정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 기관들은 35퍼센트에 머물렀고, 40퍼센트 정도의 기관에서 '단체 리더들이 프로그램 결정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교육 내용의 선정이 주로 단체의 정체성과 관련되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3-6 교육내용을 무엇으로 선정할지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있다

	수(명)	비율(%)
전혀아니다	9	4.5
그렇지않다	25	12.4
보통이다	39	19.4
그렇다	102	50.7
매우그렇다	26	12.9
계	201	100.0

3-9. 교육 프로그램 내용의 선정 및 개발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수(명)	비율(%)
전혀아니다	3	1.5
그렇지않다	42	20.9
보통이다	85	42.3
그렇다	59	29.4
매우그렇다	12	6.0
계	201	100.0

3-10. 단체 리더들이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선정 등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수(명)	비율(%)
전혀아니다	2	1.0
그렇지않다	44	21.9
보통이다	71	35.3
그렇다	68	33.8
매우그렇다	16	8.0
계	201	100.0

그러나, 교육목적 및 내용의 명확성에 비하여 그 전달체계 및 교육방법과 여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48퍼센트의 기관들이 현재 교육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36퍼센트 정도의 기관은 홍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자체공간의 부족을 호소하는 기관도 39퍼센트 정도에 달했다. 30퍼센트 정도가 전문 교강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25퍼센트 정도의 기관이 교강사의 전문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3-1 현재 교육재정 확보에 문제가 없다.

	수(명)	비율(%)
전혀아니다	20	10.0
그렇지않다	74	36.8
보통이다	72	35.8
그렇다	30	14.9
매우그렇다	5	2.5
계	201	100.0

3-2 홍보방법이 효과적이다.

	수(명)	비율(%)
전혀아니다	11	5.5
그렇지않다	60	29.9
보통이다	82	40.8
그렇다	44	21.9
매우그렇다	4	2.0
계	201	100.0

3-3 전문 교강사 확보가 용이하다.

	수(명)	비율(%)
전혀아니다	6	3.0
그렇지않다	55	27.4
보통이다	67	33.3
그렇다	63	31.3
매우그렇다	10	5.0
계	201	100.0

3-4 교육 담당자들의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다.

	수(명)	비율(%)
전혀아니다	4	2.0
그렇지않다	45	22.4
보통이다	57	28.4
그렇다	80	39.8
매우그렇다	15	7.5
계	201	100.0

3-5 차제 교육공간이 충분하다.

	수(명)	비율(%)
전혀아니다	27	13.4
그렇지않다	52	25.9
보통이다	60	29.9
그렇다	57	28.4
매우그렇다	5	2.5
계	201	100.0

3-7. 다른 단체와 교육프로그램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수(명)	비율(%)
전혀아니다	7	3.5
그렇지않다	51	25.4
보통이다	74	36.8
그렇다	60	29.9
매우그렇다	9	4.5
계	201	100.0

3-8. 학습자들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교육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수(명)	비율(%)
전혀아니다	4	2.0
그렇지않다	40	19.9
보통이다	92	45.8
그렇다	58	28.9
매우그렇다	7	3.5
계	201	100.0

4.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활동가 인식

대부분의 기관이 민주시민교육은 그 실시단체의 이념과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으며, 그 결과가 회원 조직화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관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교육 결과가 향후 시민운동 전반의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4-1 민주시민교육은 그 실시 단체의 이념과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수(명)	비율(%)
전혀아니다	1	.5
그렇지않다	17	8.5
보통이다	23	11.4
그렇다	122	60.7
매우그렇다	38	18.9
계	201	100.0

4-2 민주시민교육의 결과는 회원 조직화로 연결되어야 한다.

	수(명)	비율(%)
전혀아니다	2	1.0
그렇지않다	26	12.9
보통이다	32	15.9
그렇다	104	51.7
매우그렇다	37	18.4
계	201	100.0

4-3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가 향후 시민운동 전반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

	수(명)	비율(%)
전혀아니다	1	.5
그렇지않다	8	4.0
보통이다	39	19.4
그렇다	101	50.2
매우그렇다	52	25.9
계	201	100.0

4-4 민주시민교육에서는 교육과정에서 학습자들의 자유로운 생각이 표현되는 것을 모두 허용하여야 한다.

	수(명)	비율(%)
전혀아니다	1	.5
그렇지않다	8	4.0
보통이다	19	9.5
그렇다	105	52.2
매우그렇다	68	33.8
계	201	100.0

그러나 민주시민교육 자체의 역사적 사회적 성격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거리를 제공하였다. 우선, 국가나 정부출연기관들도 이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 시각에 대해서 60퍼센트 이상의 기관이 적극적인 동의를 표했으며 상업성 문제에 대해서 26퍼센트의 기관들이 민주시민교육의 상업성에 대해 찬성의 뜻을 밝혔다. 이것은 시민단체 스스로가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시민교육과 시민사회와의 연계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시각이 내부에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시민단체의 특성이 NGO와 NPO로 요약될 수 있다는 점에 더하여 볼 때 응답자들이 민주시민교육을 정부가 하는 것 및 상업적인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사회단체의 시민운동과 '별개의 어떤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가 실시하는 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같은 범주로 보는 시각(약 40%)과 두 개의 다른 범주로 인식하는 시각(35%)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70-80년대의 노동자 교육 민중교육운동과의 연계성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인식이 나타났다(그렇지 않다:28% 그렇다 43%, 중립: 26%). 현재의 농민교육이나 노동교육도 시민교육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64%가 동의한 반면 그 반대(20%)도 만만찮게 나타나고 있었다. 결국 민주시민교육의 정체성 혼란과 관련하여 그 역사적 기원과 현재 활동의 외연적 경계가 희미하다는 점이 이 조사에서 드러나고 있었다.

민주시민교육이 궁극적으로 시민운동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데에 대하여 아니라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가 7%에 불과한 것에 비하여 그것이 본질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갖는가라는 질문에 32%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것은 민주시민교육을 하나의 시민사회운동의 일환으로 보는 견해에 대한 이중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민주시민교육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내부에 깔려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4-5 민주시민교육에는 국가나 정부출연기관이 수행하는 교육도 포함된다.

	수(명)	비율(%)
전혀아니다	5	2.5
그렇지않다	22	10.9
보통이다	50	24.9
그렇다	86	42.8
매우그렇다	37	18.4
무응답	1	.5
계	201	100.0

4-6 민주시민교육은 70-80년대의 노동자교육/민중교육의 전통을 승계한다.

	수(명)	비율(%)
전혀아니다	7	3.5
그렇지않다	50	24.9
보통이다	53	26.4
그렇다	68	33.8
매우그렇다	20	10.0
무응답	3	1.5
계	201	100.0

4-7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서 상업성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

	수(명)	비율(%)
전혀아니다	4	2.0
그렇지않다	49	24.4
보통이다	47	23.4
그렇다	69	34.3
매우그렇다	32	15.9
계	201	100.0

4-8 민주시민교육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다.

	수(명)	비율(%)
전혀아니다	16	8.0
그렇지않다	49	24.4
보통이다	37	18.4
그렇다	79	39.3
매우그렇다	19	9.5
무응답	1	.5
계	201	100.0

4-10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운동과 연계되어야 한다.

	수(명)	비율(%)
전혀아니다		
그렇지않다	14	7.0
보통이다	46	22.9
그렇다	101	50.2
매우그렇다	40	19.9
계	201	100.0

4-11 민주시민교육은 내용이나 목적과 관계 없이 민주시민단체들이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교육을 말한다.

	수(명)	비율(%)
전혀아니다	10	5.0
그렇지않다	60	29.9
보통이다	45	22.4
그렇다	64	31.8
매우그렇다	18	9.0
무응답	4	2.0
계	201	100.0

4-12 노동교육이나 농민교육도 민주시민교육의 한 부분이다.

	수(명)	비율(%)
전혀아니다	1	.5
그렇지않다	42	20.9
보통이다	26	12.9
그렇다	108	53.7
매우그렇다	24	11.9
계	201	100.0

4-13 민주시민교육은 시민단체의 운영에 재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수(명)	비율(%)
전혀아니다	7	3.5
그렇지않다	41	20.4
보통이다	65	32.3
그렇다	71	35.3
매우그렇다	16	8.0
무응답	1	.5
계	201	100.0

4-14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유사 단체의 교육프로그램간 연대가 필수적이다.

	수(명)	비율(%)
전혀아니다	2	1.0
그렇지않다	26	12.9
보통이다	44	21.9
그렇다	104	51.7
매우그렇다	25	12.4
계	201	100.0

4-15 민주시민교육의 최우선 대상은 자기 단체 회원교육에 있다.

	수(명)	비율(%)
전혀아니다	2	1.0
그렇지않다	22	10.9
보통이다	51	25.4
그렇다	103	51.2
매우그렇다	23	11.4
계	201	100.0

5. 향후 개선 요소

교육 담당자들은 대부분의 교육개선 요소에 대해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예컨대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필요, 전문적인 교육담당자 양성과 인증에 대한 필요, 교육 기자재 확보에 대한 필요, 효과적인 홍보방법에 대한 필요, 교육 이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문제, 프로그램 평가의 필요성, 재정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확보 등에 대하여 대부분 강한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5-1 교육프로그램 개발

	수(명)	비율(%)
전혀필요하지않다	1	.5
별로필요하지않다	16	8.0
어느정도필요하다	20	10.0
필요하다	90	44.8
매우필요하다	64	31.8
무응답	10	5.0
계	201	100.0

5-2 전문적인 교육담당자 양성과 인증

	수(명)	비율(%)
전혀필요하지않다	2	1.0
별로필요하지않다	1	.5
어느정도필요하다	10	5.0
필요하다	71	35.3
매우필요하다	106	52.7
무응답	11	5.5
계	201	100.0

5-3 교육 기자재의 확보

	수(명)	비율(%)
전혀필요하지않다	0	0
별로필요하지않다	0	0
어느정도필요하다	27	13.4
필요하다	89	44.3
매우필요하다	75	37.3
무응답	10	5.0
계	201	100.0

5-4 효과적인 홍보방법 개발

	수(명)	비율(%)
전혀필요하지않다	0	0
별로필요하지않다	0	0
어느정도필요하다	15	7.5
필요하다	94	46.8
매우필요하다	82	40.8
무응답	10	5.0
계	201	100.0

5-5 교육 이수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 프로그램 개발

	수(명)	비율(%)
전혀필요하지않다	0	0
별로필요하지않다	3	1.5
어느정도필요하다	12	6.0
필요하다	81	40.3
매우필요하다	95	47.3
무응답	10	5.0
계	201	100.0

5-6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수(명)	비율(%)
전혀필요하지않다	0	0
별로필요하지않다	1	.5
어느정도필요하다	9	4.5
필요하다	91	45.3
매우필요하다	90	44.8
무응답	10	5.0
계	201	100.0

5-7 교육재정 확보

	수(명)	비율(%)
전혀필요하지않다	0	0
별로필요하지않다	0	0
어느정도필요하다	10	5.0
필요하다	89	44.3
매우필요하다	92	45.8
무응답	10	5.0
계	201	100.0

민주시민교육 기초조사 사업 요약 및 결론

-이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연구사업보고서 중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쟁점” 요약입니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하여 다각적 분석을 시도하면서 연구자들은 보고서 내용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쟁점들을 추출하고 심층적으로 논의하려고 시도하였다. 이 장에서는 이 보고서가 던진 질문에 대하여 간략히 그 쟁점과 발견점을 요약한 후 향후 실천방안으로서의 10 가지 Action Program을 제시한다.

시민사회가 발달하지 않은 사회에서의 시민교육은 대부분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국민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어 왔다. 민주시민교육은 국가가 주도해왔던 시민교육의 주류에 대한 안티테제로서 시민사회의 형성과 구축, 그리고 확장과 함께 하는 시민의 비판적 의식화 과정 및 스스로의 시민적 기호를 상징화하고 표현해 내는 전반적인 시민자율교육과정으로 성장하였다. 민주시민교육은 국가 내에서 그 본질로서의 정치사회의 권위주의적 성격에 대하여 저항하여 왔으며, 경제적 토대가 요구하는 노동자성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를 담당해 왔다. 국가의 시대를 넘어 지구화(globalization)시대를 맞고 있는 지금 국민중심주의에 입각한 시민교육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으며, 지구시민사회(global civil society)를 지향하는 시민교육의 방향 정립이 주요한 주제로 제시되고 있다. 한편, 탈근대사회로의 전향 속에서 포스트모더니즘과 신사회운동의 결합 속에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새로운 사회운동 형태들’ 예컨대 여성운동, 환경운동, 주민자치운동, 미디어 운동 등이 시민사회의 본질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화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시민교육에 관한 이론화는 대부분 미래시민의 주역으로서의 청소년기 이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정규 교과과정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시민사회 구축과정에서 나타났던 다양한 비판적 성인교육의 장면들을 이론적 틀 안에 포괄적으로 담아내지 못하였다. 또한 탈근대주의사회 및 평생학습사회 속에서 시민사회의 보다 적극적 역할 및 그에 부응하는 교육목적, 대상, 방법, 양식의 개발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연구자들은 민주시민교육을 국가 부문에 대한 시민사회의 형성과정과 함께 성장하면서 시민사회의 구성원들의 가치, 이념, 사고, 행동 등을 형성함과 아울러 그들 간의 관계를 새롭게 구축해 나가는 교육의 과정으로 규정하였다. 민주시민교육은 국가의 일방적 정치사회화에 대하여 (넓은 의미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주도하는 비판적 성인교육의 일환이다.

시각을 넓혀 볼 때, 우리나라 민주시민교육의 역사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40여 년을 포괄한다. 이론적 기초를 구성하는 측면에서 이 보고서는 민중교육과 노동교육을 함께 다룸으로써 최소한 이론적 지평에 있어서 민주시민교육의 역사를 확장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실제 사태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그 분석 범위는 여전히 좁은 의미의 민주시민교육, 다시 말해서 최근 시민운동이 다루어내고 있는 참여학습 중심의 시민교육활동의 역사로서의 최근 3-4년을 포괄하는데 그치고 있다. 남은 과제는 70년대 이후부터 다양하게 전개되어 온 농민교육, 노동교육 등의 실제 사태와 현재의 시민교육의 사태를 실천과정 안에서 접목

시키는 것이라고 보인다. 이것을 위해서는 70년대 이후부터의 가톨릭 농민회, 기독교 농민회 등의 농민운동과 농민교육 활동, 크리스찬 아카데미 혹은 산업선교회들의 활동 등에 대한 보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수행되었던 교육방법, 목적, 대상 등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가 필요하며, 그것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양태들을 비교분석하는 부분이 향후 연구 과제로 남아있다.

현 단계 민주시민교육의 본질을 정의하는 것은 계급운동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노동교육에 대한 정의처럼 깨끗하게 정의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민주시민교육은 생활정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목적, 내용, 주제, 방법 등이 매우 다양할뿐더러 모호하기 때문이다. 이 점이 바로 계급운동과 차별성을 가지는 부분이며, 이 자체를 이론적으로 정리하기는 매우 어렵다. 오히려 경계를 분명히 구분하기 힘든 것이 민주시민교육의 한 가지 본질일 수 있다. 학교교육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제도적 특성으로 인해서 안과 밖의 경계가 분명히 구분되지만, '제도 밖'에 놓여있는 교육의 경계를 구분하는 것은 그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본 보고서가 추출해 낸 민주시민교육의 본질적 지향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사회를 형성, 방어, 구성하는 교육이다. 민주시민교육의 중심에는 시민단체와 시민운동이 존재한다.
- 민주시민교육이 지향하는 가치는 일상적인 모든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민주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있다.
-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운동의 수단이 아니다. 목적 자체이다.
- 일상성의 문제에서 시작하여 이론적 구조성으로 확대된다. 내 삶은 학습의 재료이다.
- 교수자와 학습자의 경계구분에 있어서의 이분법을 지양한다. 가르치면서 배운다.
-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민주적 의사소통 능력 및 지식구성능력 등에 대한 최대한의 신뢰에 기반한다.
- 상업성을 배제한다. 영리를 위해 전환되는 순간부터 그것은 민주시민교육이 아니다.
- 전문교육보다는 일반교육이다. 전문적 기능성은 민주시민교육의 영역 밖에 있다.
- 생활정치 장면에서의 의사결정 능력을 함양한다.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사회를 형성하고 방어하며 그 내용성을 풍부하게 하는 데에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교육활동을 지칭한다.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은 그 교육목표이자 내용인 시민성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그것을 개개인이 내면화해야 할 고정된 행동특성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 특성은 구성원들이 시민사회의 속성을 무엇으로 보고 있으며, 그 발전적 지향점을 어떻게 잡아 나아가고 있는가에 의해 규정되는, 매우 가변적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민주시민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등에 대한 질문은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시민사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얽히게 된다. 물론 이것이 특정한 시민사회를 위해 민주시민교육이 복무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

니다.

시민사회의 핵심은 시민담론을 통해 창출되는 대항 헤게모니 구조 및 그로부터 확보되는 공공영역의 정당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자율적 공간구조는 끊임없는 시민의식화와 시민행동의 양 측면이 함께 연결되어 지지되어 나갈 때 가능한 것이다. 과연 그동안 이러한 전체가 시민운동과 시민교육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만족되어 왔는가를 묻는 것이 필요하다. 민주시민교육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인 존재라기보다는 다양한 형태와 목적의 시민운동의 한 부분으로 위치 지워진다. 따라서 그 안에 담긴 운동성(목적 지향성)과 교육중심성(참여중심성)의 모순을 변증법적으로 해결해가면서 시민단체활동의 조직활동 안에 유기적으로 결합될 필요가 있다.

민주시민교육의 존재조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던 신사회운동뿐만 아니라 그 형성의 지지기반이 되었던 민주화 정치투쟁 과정에서의 교육활동 및 노동운동과 연계된 제반 교육활동까지 함께 포괄할 필요가 있다. 해방 후 한국의 민주시민교육은 민주화 정치교육과 70년대 이후 노동교육이 확보해 놓은 민중교육의 지평 안에서 새로운 참여중심 방법론과 지역 학습공동체의 가능성을 함께 포괄하며 성장하였다. 연구자들은 민주시민교육이 90년대부터 열리게 된 시민사회의 영역에서 진행되는 활동이 아니라 보다 포괄적이고 연속성을 가지는 사회운동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구체적으로 시민운동의 축과 시민교육의 축이 어떻게 상생효과를 내면서 시민사회담론의 구성과 성장에 기여하였는가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는 향후 추수 연구들을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현 단계 민주시민교육의 가장 큰 쟁점은 그 정체성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일단 그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교육기획자들의 머리 속에 존재하고 성장한다. 그들의 개념적 인식틀이 현실적 조건과 만나면서 민주시민교육의 본질과 형성발달과정을 선형적으로 규정하게 된다. 현 단계 민주시민교육 안에는 매우 이질적이고 다양한 교육양식, 교육방법, 교육목적, 교육대상, 교육가치 등이 혼재되어 있다. 이들을 하나의 이론 혹은 관점의 테두리 내로 통합하여 정리해 내는 일은 향후 많은 노력과 관심을 요청하는 작업이다. 교육양식의 측면에서 볼 때 민주시민교육은 구조화된 교육프로그램 및 조직화를 통한 학습소모임의 두 가지로 크게 대별될 수 있었다. 우선 구조화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공개강좌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의 가능성과 한계를 밝힘과 아울러 참여중심 교육방법론을 통하여 획득될 수 있는 성과와 한계에 관하여 논하였다. 또한 지속성을 가진 소모임 학습공동체를 통한 지역조직화 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는 누구이며, 그들은 어떻게 학습하면서 스스로를 변화시켜 가는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 리더로 성장하며 시민사회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가라는 질문들이 향후 지속적으로 답해져야 하는 질문으로 제기되었다.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실천 현장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이론적 개념적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혼란이 존재한다.

- 교육실천과 관련된 구조적인 인식을 결여하고 있다.
- 인간중심보다는 조직(단체)중심의 교육이다. 혹은 조직문제를 해결하면 인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본다.
- 교육의 목표, 위상이 불분명하다.
- 교육사업의 구조적 안정성이 부족하다.
- 보다 적극적으로 새로운 방법론 및 교육양식에 대한 발굴이 필요하다.
- 내용영역별 구분을 넘어선 의제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

시민교육이 시민운동과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는 만큼, 사회운동의 두 가지 축, 즉 의식화와 조직화의 연계는 시민교육에 있어서도 여전히 중요한 질문거리이다. 재야에서 이루어진 교육운동사는 결국 의식화와 조직화의 변증법적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이 시민교육 부문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가는 여전히 대답되지 않고 있는 숙제이다. 민중교육에서는 씨알의 소리처럼 민중 한 사람 한 사람을 각성하도록 만듦으로써 사회적인 비판 안목을 기르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 요컨대 의식화가 가장 중요한 화두였다.

노동조합이 조직되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노동계급교육에는 의식화 차원을 넘어서서 노동계급의 이익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화 전략이 보다 중시되었다. 조직화 전략에 의해 의식화의 내용과 형식이 결정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90년대 이후 등장한 시민교육은 노동운동의 조직화의 차원과는 구분되는 시민 전체의 공공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거대한 조직이 아니라 개인의 다양성의 존중, 선택의 존중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시민교육의 초점이 의식화 혹은 조직화와는 구분되는 제3의 어떤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교육의 제자리 찾기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교육의 운동지향성을 흐리게 만드는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시민교육은 특정한 교육의 장 안에 갇혀서는 안 되며 시민생활과 집단활동 안으로 스며드는 교육이다. 그러나 교육과 집단 활동은 상당히 분절된 상태로 매우 모호한 관계를 맺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 시민운동가들이 스스로를 교육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운동가나 조직가로 생각할 따름이다.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의 경우 정책실은 갖추고 있으면서 교육담당자는 없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시민운동의 성향이 사회적 쟁점을 제기하고 확산하는 이른바 '이슈 파이팅'에 치중하고 있으면서 그 저변에서의 장기적인 의식변화로서의 교육에는 소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슈 파이팅'도 나름의 의미를 가지지만, 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쟁점을 제기하는 과정이 대중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이 바로 이러한 연계를 위한 매개고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 많은 경우 소홀히 취급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서 조직화의 사례로 든 광명YMCA 혹은 녹색여성모임의 경우 그 활동가들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오히려 교육자로서 규정하고 사업을 수행하였고, 새로운 비전을 창출하고 있었다.

교육이란 자신에 대한 자주성과 성찰성의 고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 볼 때, 다

를 아닌 사회운동과의 고리를 형성하는 기점이 된다. 지금까지의 자신에 대한 성찰, 사회적인 통합과 타인과의 연대, 정치적 이슈에 대한 민감성의 부분에 대한 연계가 있어야 하며, 대중에 기반한 장(場)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확산적인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즉 시민운동의 다양한 쟁점을 제기하고 그것을 통해 시민활동의 장을 확대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다른 한편에서 ‘수렴적인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즉 개별학습을 촉진하며 학습공동체 혹은 소모임 등의 활동을 통해서 개인의 세계의 자주성을 확보해나가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연구자들은 민주시민교육의 목적성과 관련하여 일종의 긴장감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요컨대 단체의 철학과 목적이 한편에 있고, 그것과 거리를 가진 학습자들의 다양한 관점들이 다른 한편에 있을 때 과연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한편에서, 이들 교육기획자들은 ‘단체의 운동성’과 구분되는 ‘교육활동’의 본질이 자율적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감각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민주사회의 성인은 스스로가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교육이란 이러한 능력을 신장하는 것을 제일의 과업으로 삼고 있다고 하는 믿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서, 시민단체의 교육은 운동성이 지향하는 바를 확대하고 보다 많은 참여자들을 끌어들이는 장치라는 인식을 함께 가지고 있다. 결국, 교육은 우선 교육 기획자들의 의도를 ‘교육 목적’이라는 부분으로 받아들이면서 끊임없이 학습자들을 그 의도의 방향으로 끌어내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두 가지 상충되는 본질 사이에서 이들이 바라는 최적의 결과는 단체의 지향점을 성취해 내면서 동시에 학습자들의 합리적 판단과 자율적 학습 동력을 살리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교육방법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다. 과연 어떠한 종류의 교육방법들이 이 모순을 해결하면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민주시민교육포럼이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민주시민교육방법론 워크숍’의 과정 속에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다. 교육기획자들이 보기에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사회의 기본이념, 가치관, 운영원리 등을 다양한 교육기법 혹은 방법론을 통하여 교육 훈련시키는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인지적 차원을 넘어서 학습 결과가 삶의 가치관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와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이들의 일차적 목표였다.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 사안으로 떠오른 쟁점은 “민주시민교육이 획일화가 아니라 다양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지식습득에서 삶의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육, 그리고 삶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교육”을 어떻게 현실화해 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이것을 위해서 이들이 전제로 삼았던 것으로, 교사와 학생을 기존의 방식, 즉 지식을 가진 자와 못가진자, 혹은 모르는 자와 아는 자로 이분화하기보다는 동일 선상에 놓고 이들이 동료된 입장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학습자의 참여를 교육 담당자와의 열린 대화 안으로 이끌어 들이는 것이 교육의 시작이자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서로 공유를 하게 되고 이견도 조율되면서 자발적인 참여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해답을 스스로 찾아가게 되는 과정을 추구하는 것이다.

실제 교육장면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러한 상황 설정이 현실화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는

것이 이들의 고백이다. 우선 교수자와 학습자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는가라는 문제가 바로 이점에서 난제로 걸려 있다. 활동가들은 민주시민교육이 다음과 같은 철학 위에서 이루어진다고 본다. “삶의 경험 속에서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다. 학습자 안에 이미 답이 녹아들어가 있다. 교육자의 역할은 그것을 표출시키고 다른 사람의 경험과 함께 연결하고 분석함으로써 그 내러티브 안에 숨어 있는 왜곡과 소외의 근원을 밝혀 내는 것이다.”이 과정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 바로 참여중심 방법론으로서의 민주시민교육방법론이었다.

노동교육은 노동자라는 다소 응집성 높은 집단이 학습의 주체라는 점에서 시민교육 일반과 다소 차이를 가지지만, 본 연구에서는 노동교육, 빈민교육, 농민교육 등 계층교육이라고 이름 붙여진 교육 역시 민주시민교육의 중요한 부분임을 발견하였다. 노동자건 빈민이건 여성이건 시민이건,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에게 붙여진 다양한 명칭의 하나라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며, 교육적으로 보다 중요한 것은 이 용어들이 지시하는 정체성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며 성숙시켜내는 일인 것이다. 예컨대, 여성이라는 특수성은 노동자를 규정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대상중심 분류법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성에 있어서 환경, 자치 등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주제 영역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어떤 교육 부문도 마찬가지이다.

80년대로 넘어오면서 노동교육의 대부분이 선전 선동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비판이 있었다. 지도부 중심의 이념과 전략을 전파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었으며 그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조직원들의 개인발달에 목적을 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 비하여 현재의 민주시민교육이 얼마나 이 양 측면을 균형 있게 담당해 내고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이 점 역시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현 단계의 환경, 미디어, 여성, 주민자치 등 민주시민교육이 지향하고자 하는 바는 교육대상을 객체화시키는 방법을 쓰지 않는 것으로서, 일상과의 관계, 사람을 변화의 힘을 확인하게 하는 교육이다. 그런데, ‘원리상’으로 보면 이 점은 이전의 민중교육과 노동계급교육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볼 수 있다. 상황의 치열함과 실제 조직화라는 과제 안에서 이 ‘원리’가 간과된 경향이 있지만 원리적 측면에서는 총괄적인 의미에서 한국 사회운동사와 함께 흘러온 민중교육, 노동계급교육, 그리고 시민교육이 동시에 추구했던 지향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노동계급교육이 기본모순 (토대와 상부구조의 문제 등)에 터해서 규정되었던 것에 반해서 테제중심, 의제중심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주체가 누구든, 자금이 어디서 나왔든, 대상이 누구든, 교육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지향하는 이념과 테제 혹은 의제가 맞으면 그것을 범주 안에 넣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과거 자유총연맹의 교육을 민주시민교육으로 보는 사람이 없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시민사회단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최근 들어서 그 숫자나 비율이나 모두 줄었다고 보인다. 제도적 기반을 가지는 성인교육기관의 절대 숫자가 늘어났고, 이에 따라 지역으로 들어가면 주민자치센터 복지센터 등 거의 모든 종류의 기관과 단체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반해, 시민사

회단체들은 문제제기식의 쟁점 확산작업에 치중하면서 지속적인 조직화를 동반하는 교육에 미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사회운동단체들보다는 자원봉사조직 등을 통해 보다 확대되어가고 있다. 요컨대 교육의 절대량은 늘어나지만 그것이 사회변혁과 시민사회 구축이라는 목표를 정면으로 내걸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있다.

예컨대 ‘좋은 부모되기 교육’이나 ‘자녀지도방법교육’ 등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들은 시민운동단체와 일정한 거리를 가지면서도 참여자들의 의식화-조직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런 교육을 민주시민교육의 범주로 넣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제기되는 것이다. 이런 양상은, 과거 사회운동을 축으로 하는 투쟁적 교육이 한 면을 차지했다면, 이제 그것이 확보해 놓은 생활세계의 마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기 표현과 구현’을 위한 다양한 교육이 확장되는 장면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문제는 우리 아이한테 좋은 책을 고르는 것을 넘어서 책 읽는 문화, 어떻게 좋은 책을 읽힐 수 있을까 하는 등의 제도적인 문제로 확장되도록 이끄는 일이다. 공공영역의 공간이 확대되고 그것을 받쳐주는 것이 시민교육이 확장되는 과정은 명확히 운동성을 가진다. 토론과 자기 표현을 통해서 확장된 공간은 국가와 자본으로부터 자율성을 갖는다.

시민교육의 최근 동향은 한편에 있어서 분명히 시민사회운동의 흐름을 그 중심축에 놓고 있는 듯하지만, 교육의 개별 양태를 자세히 살펴보면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의 능력개발, 기술적 차원의 고양 등에서부터 안정된 생활세계 차원에서의 정착 등이 강조된다. 최근에는 사회운동에서도 영성 훈련 부문이 가미되고 강조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사실상 사회운동의 차원에서의 성과로 나타내기 보다는 보다 장기적이고 개인 내면 깊숙이 이루어지는 변화를 지향하기 때문에 사회단체들의 단기적 활동 목표로 담아내기가 어렵다는 문제를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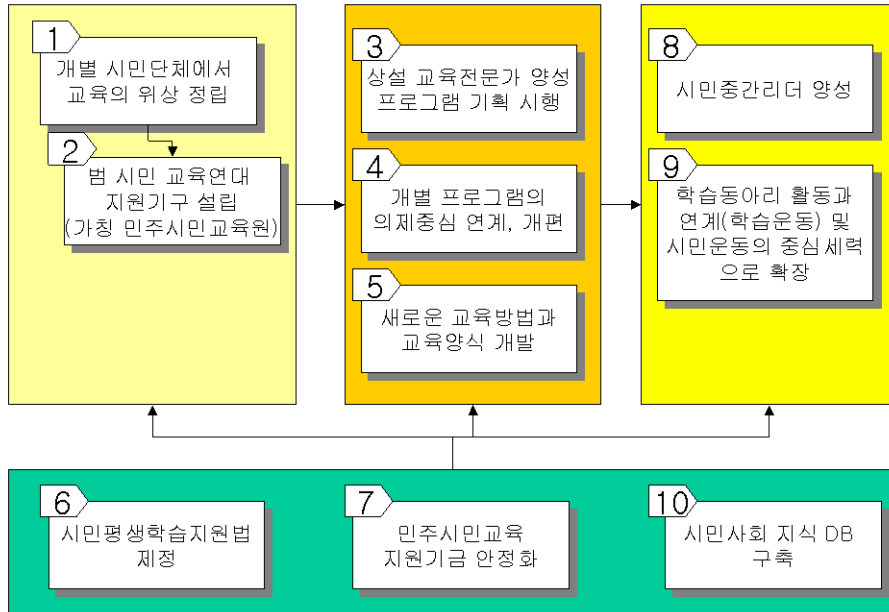
향후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은 무엇인가? 시민교육을 통하여 과연 시민이 교육되고 있는가? 시민운동 차원에서 볼 때 행사 혹은 이벤트성 시위 등이 시민의 의식에 영향을 주고 변화를 촉발하는 기체로서 일상 교육활동에 비하여 훨씬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정책 지향적 행사들이 대중과 깊이 있는 호흡을 함께 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그들이 이벤트를 통해 얻게 되는 경험을 집단화하고 구조화하는 과정은 그 경험을 함께 털어 놓고 그 안에서 공동의 기억과 가치, 그리고 방향을 찾아 나가는 새로운 만남의 장으로서의 시민교육활동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시민단체들은 개별적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이슈를 개발하고, 그에 기반하여 가치통합적인 운동을 전개하며(각 부분별 운동의 가치의 통합적인 쟁점 제기), 지역에 터한 의제중심 통합교육을 통해 제반 쟁점들이 삶의 구체적 장면 안에 접목될 수 있는 가치, 전략, 변화 등을 교육하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그러한 종합적이고 생활중심적 변화가 시민의 일상에서 참여적 운동으로 보다 확산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의 내용적 발흥기에 있는 우리 사회의 특수성에 의거해 본다면, 시민교육은 이제 시민운동의 한쪽 날개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그 역할은 과거 민중교육의 전통과 역사를 이어받으면서도 다른 한편에서 적극적인 시민담론생산 학습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본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들도 적극적인 사회교육기관이라는 자세로, 그들이 축적한 전문성의 틀 안에서 지속적인 연결망을 공고히 구축해 나가는 한편

그 전문성을 끊임없이 갱신해 나가는 적극적이고 열린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10 단계 Action Program

민주시민교육의 향후 발전을 위한 10 가지 실천 과제(action program)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IX -1] 민주시민교육 발전을 위한 10 단계 Action Program

1단계: 개별 시민단체에서 교육문화의 활성화하고 그 위상을 정립하라.

시민단체 활동 안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위치를 격상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은 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영역의 쟁점을 추출하여 문제로 제기하고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벌이는데 대부분의 역량을 소비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대개 몇몇 활동가들의 헌신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들의 역량이 소진될 때 운동의 활성화도 역시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 조직 내에서 교육의 위치가 상시적이고 중심적인 것으로 자리잡게 될 때 조직 내에는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우선 중심활동가들 사이의 상호 학습과 의사소통이 촉진됨으로써 조직 내에 지식의 창출과 확산 구조가 정비된다. 둘째, 새로 진입하는 활동 역량이 보다 심도 있는 문제의식을 공유함으로써 활동 역량의 폭이 확대될 수 있다. 셋

제, 교육의 자체적 논리를 통해서 의사결정 구조의 권위주의적인 피라미드가 수평적 대화구조를 변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단체의 활동이 이벤트성 일회성 운동 구조로부터 교육중심의 상시활동으로 변화할 수 있다.

이것을 위해서 사회단체 내에 교육 부서를 상설화하고 그 활동이 조직의 전반적 의사소통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단계: 의제 중심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범시민 교육연대 지원기구를 설립하라.

시민교육은 그 본질에 있어서 자 단체의 범위를 넘어선 보다 넓은 의미의 공공성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향후 의제중심의 교육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게 될 경우 몇몇의 종합사회운동 단체들, 예컨대 참여연대, 경실련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 개별 단체들은 지역에 기반을 둔 종합의제개발과 교육을 위해서 협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시민단체들이 주도하는 시민교육이 상시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비구조화된 아마추어리즘으로는 어렵다. 최소한 교육의 질이 보장되어야 하며 교육의 결과가 한편에서 국가 권위주의화로부터 시민사회의 공공성을 방어하는 실제 역할로 전환될 수 있는 활동기제를 촉매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전국적 혹은 광역조직으로의 연계를 갖춘 민간시민교육기구가 창설되고 그 협력 체계 속에서 교육자,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의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민간이 주도하는 전국단위의 민주시민교육원이 설립되고 그 기구는 개별 시민단체 교육활동을 연계하고 지원하는 중심체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 기구는 시민단체 교육활동을 네트워킹하고 영역별 강사뱅크를 구축하고 개별 단체에 대한 교육컨설팅을 수행하며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을 맡아야 한다. 이 기구는 기본적으로 시민교육에 참여하는 시민단체들의 교육부문 연대기구로서 성격을 가진다.

3단계: 프로그램의 질을 좌우하는 교육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상설화하라.

교육의 과정이 학습자의 변화과정을 이끌어내고 촉진하는 과정이라고 했을 때 이는 단순히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이상이다. 민주시민교육은 “누가 기획하고 진행하는가”가 어떤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느냐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이다.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것 역시 누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전문적인 교육기획자와 진행자가 되는 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다. 하나는 시민단체의 상근자로서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교육과정에 참가한 사람들이 성장하여 역량을 갖추게 되는 과정이다.

현재 대개의 경우 활동가들은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운동을 위해 들어온 사람이다. 또한 상근자들이 과도한 업무로 자주 바뀐다. 또한 운동적 관심과 경험이 없는 사람도 상근자로 지원하는

추세다. 운동적 관심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한꺼번에 담보해 내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 개별 교육사업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그 전문성보다는 그것에서 얼마나 순수익을 올려야지만 활동비를 건드리지 않고 활동할 수 있을 것인가에 항상 촉각을 세우고 있어야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단체의 경우 안정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담당자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 만큼 단체의 대표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손꼽기도 쉽지 않다.

현재 분야별로 지도자 양성과정이나 교사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과정은 내용 영역별로 구체적인 특정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진행자를 양성하는 교육이지 전문적인 교육기획자와 진행자를 양성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다.

요컨대, 보다 전문적인 교육기획자와 진행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것은 민주시민교육의 대상영역을 확장하는데 핵심 사안이다. 현재는 한 단체에서 성공적인 프로그램이 나오면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다른 단체에서 진행하는 일이 다반사다. 단체별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경우가 드문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전문인력이 양성이 되었을 때에야 분야별로 대상별로 주제별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진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언제, 어디에서, 어떤 교육이 진행된다'는 정보의 안정성, 공인된 브랜드 가치를 만드는 것이 비로소 가능해진다.

4단계: 내용영역 중심에서 의제중심으로 교육하는 새로운 판짜기가 필요하다.

이제까지의 민주시민교육은 주로 가치 중심적인 접근과 역사 중심적인 접근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문제중심적이거나 문제해결과 관련된 접근은 교육의 범주 내에서 보다는 주로 실천프로그램의 연장에서 다루어져왔다. 그러나 이 외에도 민주시민교육이 다루어야 할 가치와 내용들은 너무도 많다. 예컨대 생활정치를 포괄하는 의사소통기법, 사회적 감수성 훈련,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도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주체성 훈련, 타문화 이해와 종교 다원주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힘 찾기, 삶의 기준으로서의 공공선 이해하기, 생활세계 문제 느끼기, 양성평등의식, 민주적 대화법 및 조직구성원간의 의사소통, 민주적 의사결정, 문제해결책 만들기 등 살아가는데 관계된 거의 모든 것이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기술 영역이라고 할 만하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개별 내용영역 별로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난삽할뿐더러 일종의 시민사회 구축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내기도 어렵다. 향후 시민교육은 내용중심보다는 구체적으로 선택해야할 문제를 중심으로 가치의 문제, 제도의 문제, 태도의 문제 등을 아우르는 복합적 의제중심 접근이 필요하다. 이것은 다양한 내용이 함의하고 있는 문제 및 갈등 상황을 하나의 통일된 복합체로 재구조화하고 그 문제의 층위별로 다시 구분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구체적인 실천과의 연계를 통하여 끊임없이 재구조화되는 과정이며, 문제중심적이고 문제해결에 중심을 둔 접근법을 통해 통합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이는 현재처럼 미디어 교육, 인권교육, 환경교육, 지방자치교육, 여성교육 등으로 영역을

구분하는 문제는 여전히 유효한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요컨대, 민주시민교육에서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안을 맥락적으로 본다는 것인데 이는 하나의 시각에서가 아니라 여러 차원에서 문제의 본질을 분석하기위한 접근을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현재 내용중심으로 영역화되어 있는 각 분야에서 그 사안을 여러 차원에서 볼 수 있는 접근방법과 영역 간 상호작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단체를 넘어서고 지역적인 과제와 문제의 당사자인 구체적인 개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활발히 시도되어야 한다.

5단계: 교육방법론과 새로운 교육양식에 대한 보다 심화된 고민이 필요하다.

참여중심 방법론을 사용해 본 민주시민교육 기획자들은 그 방법론 안에 이미 그 교육이 지향할 가치와 목표, 내용이 들어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 다시 말해서 민주적이고 참여중심적인 교육방법을 적용하여 상호간 경험 공유와 의사소통 및 갈등조율과정을 거치게 하면 그러한 교육방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의도했던 교육 내용들이 이미 학습자 스스로에 의해 가르쳐지고 있더라는 발견에 터한 믿음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교육 기획자들이 발견해 낸 사실 중의 하나는 교육방법론 속에 교육의 목적이 내재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방법론 자체가 민주시민교육의 지향성을 본질적으로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이 역학관계에 대해서는 앞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였듯이 그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들은 참여자들의 의사소통을 열린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도구에 불과하다. 문제는 그것들을 일종의 컴포넌트로 구성함으로써 교육이 지향하는 내용이 학습 과정에서 민주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구조로 구축해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 있다. 민주시민교육 방법론 카테고리를 보면 ‘자신의 생각이 자유롭게 표현이 된다’, ‘놀이와 문화다’, ‘개념의 전달이 아니고, 참여자를 배려하는 것’ 등이 지적된다.

그러나 참여중심 방법론이 반드시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참여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암묵적 경험을 밖으로 표출하고 공동화하는 데에는 효과가 있지만, 보다 치밀하고 논리적인 논의 구조의 발전을 원하는 참가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그리 큰 만족을 주지 못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자칫 ‘학습자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일방적 신뢰가 전제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일방성 혹은 일차원성을 넘어서 이 방법론이 가정하는 것 중의 하나는 교사가 학습자에 대하여 신뢰를 가지는 것을 넘어서 교사 스스로도 일종의 학습자로서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학습자와 함께 배워나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학습자도 이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배운 것,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교사에게 가르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중심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모든 맥락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학습자가 처한 맥락과 관련이 있다. 특히, 지식인, 관료 등의 권위적 집단이나 혹은 자기주도학습의 경험이 많지 않은 학습자들의 경우 오해가 자주 발생한다.

요컨대, 시민교육의 본질이 흔들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다양한 계층의 학습자들의 동기와 참여를 촉진함

으로써 교육의 목적과 방법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교육양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6단계: 시민평생학습지원법을 제정함으로써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라.

현재 평생교육법은 우리나라 성인교육의 총괄적 모범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인적자원개발법이 대부분의 성인교육을 경제자원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시민교육영역은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관련법들이 상호 연계와 구조를 가지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존재할 경우 사문화될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이 교육기본법의 하위법으로서 상호 보완적 기능을 하면서 학교교육을 구조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처럼 학교 밖 평생교육 영역 역시 이러한 구조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상위에 평생교육법을 놓고 그 아래 인적자원개발법과 시민평생학습지원법을 위치시킴으로써 이 두 가지가 21세기 지식기반 시민사회를 구축해 나가는 두 가지 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평생교육법이 진정 이 두 축의 상위법이 될 수 있도록 그 취지와 내용을 전면 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유럽과 북미 그리고 아시아의 많은 나라에서 민주시민교육은 평생교육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인적자원개발 영역을 제외한 평생교육은 그 자체가 바로 시민교육이며 건강한 시민사회 구축을 위한 개인학습, 학습공동체 구축, 체계적인 시민교육 지원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 평생교육 시스템은 중앙에 평생교육센터, 시도단위에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그리고 시군구 단위에 지역평생학습관을 설치하고 서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있다. 이 시스템을 보다 확대하여 지역의 주민자치센터 등을 연계하고 각종 시민단체의 시민교육 프로그램이 함께 하는 종합 시민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7단계: 민주시민교육 지원 기금을 확보하라.

대부분의 시민들은 개인의 직업적-기능적 필요로 인해 성인교육을 선택한다. 외국어나 컴퓨터 등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에는 수강생이 몰리는 반면, 환경문제나 여성문제 등 민주시민성의 함양과 관련되는 내용에는 사람이 없다.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지 않은 프로그램은 근근히 명맥을 유지만 하더라도 다행인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활동기금이 부족한 시민단체에서 '돈을 쓰는' 민주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시민단체에서는 기본적으로 활동기금을 회원의 회비로 충당하고자 하지만, 시민사회가 성숙되어 있지 않는 상황 속에서 사실상은 상당부분 행정자치부 등이 프로젝트 형식으로 제공하는 지원기금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단체들은 이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 불필요한 업무와 경쟁 및 비효율적 중복적 사업을 피하기 어렵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민주시민교육에 투입될 수 있는 지원 기금을 확보하고 그에 터하여 안정적인 교육사업이 지역별, 내용별, 목적별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총 공교육예산의 1퍼센트 이상을 민주시민교육 특별교부금으로 평생교육재정 안에 편성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민주시민교육 지원사업을 벌여 나갈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한편 행정자치부 예산 및 각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 일부를 지역 시민교육 기금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8단계: 중간 리더십을 키워라

민주시민교육의 최대 성과는 호기심으로 참여한 학습자들 스스로가 헌신과 결단을 통해 중간 리더로 성장함으로써 시민운동 네트워크의 중추적 역할로 참여하는 것이다. 시민을 즉자적 시민과 대자적 시민으로 구분할 때, 즉자적 시민이란 생활세계를 사적 영역으로만 파악함으로써 개인적 관심이 삶의 중심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말하며, 대자적 시민이란 동일한 활동 가운데에서 공적 영역의 중요성 및 그 안에서의 자신의 역할과 위치를 자각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교육이 배출하는 중간 리더는 스스로의 삶을 대자적 위치로, 그리고 사적 영역을 공적 영역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중간리더는 특정한 조직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신의 생활 장을 역동적 자율성의 공간으로 바꾸어내는 동시에 학습의 파장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초보 참여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집단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돕고, 자신의 환경에 대한 자성적 시각을 가지고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중이 중간리더십을 가지게 되는 정도만큼 시민사회는 성숙해진다.

중간리더로 성장하는 과정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핵심은 교육에 참여한 학습자들이 교육 이후에도 (혹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일정 부분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상황(situation)이 마련됨으로써 그 안에서 재귀적으로 끊임없이 상황학습(situated learning)이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9단계: 시민중간리더를 중심으로 학습동아리 활동을 촉진하고, 학습동아리를 시민운동의 중심 세력으로 확장하라.

민주시민교육은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되며 시민들의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학습운동으로 승화되어야 한다. 북유럽에서 일고 있는 학습서클운동, 시민대학운동, 일본의 공민관을 중심으로 하는 주민자치학습운동 등이 해당 지역의 민주화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시민운동의 조직화 운동이 단지 조직의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차원을 넘어 시민의 학습세포를 확산할 수 있는 조직적인 학습동아리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지원 촉진할 필요가 있다.

학습동아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주민자치운동에서 그 맹아가 발견된다. 특정한 강사나 교육자가 시민들의 학습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이고 평등한 소통의 단위인 학습동아리를 형성하여 시민들이 교육과 학습의 주체로 나서게 하고 있다. 학습동아리에서, 학습은 조직을 살아있게 하고 조직은 학습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학습동아리는 동원을 위한 조직이나 특정한 목적달성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공동체로서, 자체정화와 자체발전의 기제를 가진다. 학습동아리는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라 평등한 망상구조이기 때문에 조직의 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즉시 주변의 여러 노드가 동시에 문제해결의 주체로 나선다는 점에서 자체정화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개체와 조직이 동시에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부적 목적이 없이도 자체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참여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일정한 책임을 자발적으로 부여받도록 하는 조직구성이 필요하다. 환경도우미 교육에서 나타나는 학습자와 교육자, 교육장과 생활장의 순환과정 등은 참여자가 활동속에서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과정을 드러낸다. 학습자는 ‘배우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르치는 도우미가 되며, 교육장을 벗어나 지역환경의 문제를 탐구하고 설명하며 해결하는 주체가 된다. 민주시민교육이 인위적으로 구분된 경계를 삶의 논리로 희석화시키면서 시민 개개인을 삶의 주체로 일으켜 세우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학습동아리는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이 된다. 이는 또한 기존 시민운동의 일회적 쟁점 확산의 사업을 넘어선, 시민운동의 조직적 비전이기도 하다.

10단계: 시민사회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라

현대사회를 지식기반사회, 정보사회 등으로 명명하는 것은 사회를 움직이는 중요한 축으로 지식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담론적 차원에서 인간을 양성하는 교육이 인간을 자원(resource)으로 바라보는 인적자원에 자리를 내어주기 시작한 것은 단지 용어의 전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내용과 전망을 제공하지 못하는 실천 영역은 자리를 잃게 된다’는 시스템의 작동논리가 언어화되어 나타난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 사회의 시스템 속에서, 막연한 ‘인간적인 것’은 무가치하게 간주된다.

시민사회를 확장하고 복원하고자 하는 노력은 무가치화되어가고 있는 ‘인간적인 것’을 가치롭게 만드는 과정이다. 그러나 인간화를 주장한다고 해서 저절로 시스템이 인간화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시스템의 논리가 헤게모니를 획득하는 과정에 맞대응하여 대항 헤게모니를 구축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교육적 과제는 인간을 되살리는 교육을 구체적이고도 활용가능한 지식의 형태로 축적하고 소통시키는 일이다.

시민사회를 확장하는 지식데이터베이스는 형식적인 면에서는 시민운동단체의 연계를 전제로 한다. 기층운동을 포함하여 시민운동이 그간 쌓아왔던 경험은 운동가의 노하우로 간주되어왔다. 기업의 인적자원관리자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회사로 이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에 반해,

시민운동은 헌신적 자세를 가지고 있는 운동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노하우를 집단화시키는데 실패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지식공유의 중요성에 대한 공동의 공감대개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암묵적인 지식을 명시적으로 집단화하는 과정에 익숙치 않기 때문이다. 시민사회 지식데이터베이스는 시민운동의 노하우를 집단적으로 축적하는 과정을 말하며, 축적이 곧 학습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가 교육 프로젝트이다.

예컨대 시민사회 지식데이터베이스에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는데 필요한 절차적-문제 해결적 지식이 축적된다. 초기에 축적된 지식은 정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나, 골간이 되는 지식이라는 점에서 각 현장에서 적용되어 풍부화될 수 있다. 풍부화된 내용은 다시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되며, 여러 사례를 통해 여과되면서 구체적이면서도 적용가능한 내용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 맞는 시민운동의 노하우를 매뉴얼 형태로 정리한 내용이자 아이디어뱅크로서, 부가적 지식 창출의 기초가 된다.